

## 서울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포럼 보고

### □ 개요

- 제목 : “서울시 성 주류화를 위한 또 다른 도전, 변화를 모색하다”
- 일시 및 장소 : 11월 24일 (화) 오후 1:30~4:30, 다목적실(서울여성플라자 3층)
- 참석자 : 총 40명  
 서울시·자치구 담당 공무원 10명 내외  
 서울시·자치구 컨설턴트 10명 내외  
 젠더거버넌스 참여자 및 여성단체활동가, 재단 직원 20명 내외
- 프로그램 (진행: 조영미 실장)

시 간	주 요 내 용	
13:30~14:00	등록	
14:00~14:20	시작	인사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14:20~15:00	발표	영상. 젠더거버넌스 활동 사례발표. 시민참여 모니터링과 젠더거버넌스 (조미순) 발표1. 서울시 및 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현황 (이재연) 발표2. 컨설턴트와 컨설팅의 역할 재정립 (장미현) 발표3. 함께 만들어가는 성인지정책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오너경)
15:00~15:50	토론	토론1. 한지영 (컨설턴트,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토론2. 문지영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부연구위원) 토론3. 송란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무처장) 토론4. 김현원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과 사무관)
15:50~16:30	전체 토론	

## 주요 내용

###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컨설팅

- 서울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역할
  - 서울시 정책의 성주류화: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대면컨설팅, 전문가 검토의견 그 외 법령 및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진행
  - (사업) 컨설턴트 활동지원: 총 22명의 컨설턴트 운영, 일자리 및 안전 분야 집중 컨설팅 매뉴얼 공유, 대면컨설팅 지원
  - 성인지예산 작성 컨설팅: 성별수혜분석 및 원인분석의 적절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과의 연계성, 성과목표와 기대효과와의 적절성 성별영향분석평가 조치 사항과의 연계성
- 법령
  - 2015년 서울시 53건, 원안동의 43%, 개선의견 55%, 제외 2%
  - 2015년 자치구 240건, 원안동의 61%, 개선의견 39%, 제외 0%
  - 법령의 절반 이상이 행정업무, 시설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 주로 위촉위원의 선발 기준, 성비, 시민사회 참여 등을 내용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짐
- 사업
  - 2015년 서울시 대상과제 65건, 실제 컨설팅 77회
  - 2015년 자치구 대상과제 542건, 실제 컨설팅 횟수 818회
  - 서울시 사업은 여성 및 아동을 위한 공간의 확보, 사업 수혜자의 요구 파악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함.
  - 자치구는 주민참여, 노인돌봄, 평생교육 등과 관련된 사업이 많고 세부 사업 단위의 경우 예산이 너무 적거나 성별 영향이 크지 않음
- 성인지예산
  - 2015년 서울시 219건, 자치구 237건 컨설팅 실시
  - 주요 내용으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수정 보완 컨설팅
- 2016년도 환류 계획
  -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과 최종 작성된 성인지예산 연계 내용 점검
  -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2015년 정책 개선안 반영 점검 기획
  - 연속 분석 사업의 정책 개선안 재분석 및 예산 반영을 통한 사업 개선 방향

## □ 컨설턴트의 역할 재정립

### ○ 컨설턴트의 역할

- 대상과제 선정 및 분석평가서, 검토의견을 위한 각 단계에서 성별 분석 및 작성법에 대해 컨설팅 진행
- 설문조사 결과, 대면컨설팅으로는 작성법에 대해서 컨설팅이 진행되고, 서면컨설팅으로는 성별요구도 및 성별수해분석에 대한 내용이 다뤄짐

### ○ 공무원의 역할과 컨설턴트에 대한 인식

- 설문조사 결과, 대면컨설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
- 전반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는 부가적이며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참여의지가 부족하며 컨설턴트는 이러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사람으로 인식
- 공무원 역시 성인지성을 높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컨설팅의 욕구가 높아지고 컨설턴트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침

### ○ 컨설턴트의 역할 재정립

- 제도의 문제점: 컨설팅 방식 및 입력 작업 중복성(GIA, 대면, 서면 등), 보고서 제출 시기 조절
- 제도 운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고 이해가 부족하여 담당 컨설턴트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컨설팅 지원 부족: 젠더 전문가로서 자치구 및 서울시의 성평등 향상을 위한 사업 당 4만원의 컨설팅 비용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현 제도는 전문가들을 저임금 비정규직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있음. 비용의 조정을 통해 컨설턴트가 정책 건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컨설턴트의 역량강화

- 컨설턴트 역량강화는 필요하지만 현 제도(비정기적 활동 기간, 낮은 비용)에서 역량강화 과정이 효과가 없음. 제도의 개선의 우선되어야함.
- 컨설턴트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함으로 공무원을 초청하여 행정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을 제안함.

## □ 성인지 정책을 위한 제안

### ○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 적절성

- 현재 진행되는 교육에 대해 사업담당자, 총괄담당자 모두 크게 효과가 없다고

설문조사에서 응답함. 교육과 컨설팅의 목적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담당자, 총괄담당자, 컨설턴트, 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시스템을 단순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현실화가 되면 컨설턴트의 업무가 늘어나지 않는지 우려됨.

- 사업, 계획, 법령은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의 분석평가서는 현재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고민이 필요함.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현실화를 위해 법령의 경우 사업과 연계된 법령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획 컨설팅의 경우 계획의 심의 의결 단계에서 젠더전문가 참여를 필수로 하거나 자문을 받도록 함.

### ○ 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 부합성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정책에 대해 성별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정책을 성인지 정책으로 개선하는 것인데, 현재 분석평가서와 컨설팅이 성인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법령은 기본 조례 및 주요 조례에 대한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필요하며 상위법 개정시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매뉴얼을 제시해야함
- 사업은 단순 성별수해 분석 내용에서 벗어나 분석방법을 다양화하고 성인지 예산을 연계함과 동시에 정책 환류 점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젠더거버넌스

- 성인지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성인지 정책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정책 환류 시스템, 정책의 중요도 선정 시 각 단계별로 시민 참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함.
- 활동가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보면 현 제도에서 시민이 참여하기는 어려움. 성주류화,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단어가 시민이 체감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임. 용어가 개선되어 시민이 알기 쉽고 참여가 많아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환류시스템 자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함.

### ○ 법령 컨설팅 개선 방안

- 법령 컨설팅의 절차적 측면: 개선의견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해야하는데 현 제도 상으로는 컨설팅 시간이 너무 부족하므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함
- 법령 컨설팅의 시스템적인 측면: 내용의 단순화가 필요하며 개선안이 반영된 실제 재/개정 여부가 확인 가능하도록 GIA 시스템이 법령 컨설팅의 환류를 위해 개선되어야함. 또한 법령 컨설팅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GIA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현재는 2009-2012년까지 분류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컨설턴트가 이용하기에 불편함.

- 우수사례의 DB화: 컨설턴트 개인이 법령 개선안의 반영을 각자 확인하는 것은 힘든 작업이며 이미 GIA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우수사례가 공유되는 것이 필요함. 우수사례의 DB화는 현재 시스템 내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임.
-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 성별성이 없는 위원회 조항은 없으며, 위촉위원의 성비 컨설팅 내용은 법령 컨설턴트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으로써 이 부분은 위원회의 여부뿐만 아니라 지표에 기능이나 심의 항목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야함

